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후식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이를 둘러싼 정권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날만 새면서 새로운 인물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 경영진과 대주주는 물론 금융브로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정치인 등장인물도 다채롭다. 양파 껍질 벗겨 지듯 켜켜이 드러나는 비리의 양태는 전 시장을 방불케한다. ‘오만군데서 암벽이 들어왔다’는 김황식 총리의 표현이 실감 날 정도다.

비리온상 금융권력·감독기관

검찰이 지난 3월 15일 부산자축은행 그룹 5개 계열은행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를 시작한 이후 한달 만에 박원호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임원 21명을 불법대출과 배임, 횡령 등으로 기소할 때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비리의 초점은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 전·현직 직원 7명

이 줄줄이 구속된데 이어 지난 3월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고 김종창 전 금감원장까지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소환되면서 감독기관의 비리로 확

‘악마의 주술’ 또 불러내려는가

대됐다.

감사원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감원의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토비스트 윤여성씨가 저축은행 감사의 주심이었던 모 감사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10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된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영업정지를 불러온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것이 목표였을 게다. 한데

역주의를 개입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대통령 선거까지 끌어들여 ‘광주의 선택’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부산자축은행 그룹 금융비리와 로비의혹에 대주주를 비롯한 광주도와 출신 동문간 연결고리, 즉 혁연이 작용한 흔적이 있다. 하지만 이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 저축은행 사태를 ‘호남 비리’로 몰고 가려한다면 이는 본질을 흐도하고 현 정부의 실패를 펴넘기려는 사술(詐術)에 불과하다.

지난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연루됐을 것

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현 정권 인사들의 이름들이 잇따라 오르내리는데 당황한 여권이 영남지역 피해자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시키려는 ‘물타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민 피해 회복이 최우선

그러는 사이 서민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수십년간 목욕탕 때밀이, 파출부, 노집장을 하며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불리려 저축은행에 맡길 예금을 날리게 된 그들에게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복장 더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자축은행 비상대책위가 5일 ‘저축은행 대주주·임원들의 부실대출과 재산은닉’ 등을 2008년 이후가 더 심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다”며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악마의 주술(呪術)’. 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그렇게 일컬었다. 그만큼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책 사업 갈등으로 전국이 사분오열된 시점에서 충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지역주의 맹령을 불러내는 것은 더 큰 후유증만 부를 뿐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정치부장 who@kwangju.co.kr

고 있다. 지역 중소업체는 아예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기술·생산 인력은 물론 영업인력, 빠가기에 나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여기에 전국 5개 권역을 LED 네트워크로 묶어 지역 간 경제체계를 도입한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도 지역 LED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업종 다양화를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법이다. 무질서하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해 목을 조르는 행위는 대기업의 횡포일 뿐이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요즘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것 아닌가.

대기업은 LED 산업의 진출을 자제하고 정부도 재벌기업의 무한 탐욕을 억제시킬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기업 무한 탐욕에 흔들리는 광주 LED

광주시의 특화산업인 LED(발광다이오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저가·물량공세를 앞세워 LED 조명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광주 지역 LED 관련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 5개 권역을 LED 네트워크로 묶어 지역 간 경제체계를 도입한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도 지역 LED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업종 다양화를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법이다. 무질서하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해 목을 조르는 행위는 대기업의 횡포일 뿐이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요즘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것 아닌가.

대기업은 LED 산업의 진출을 자제하고 정부도 재벌기업의 무한 탐욕을 억제시킬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변별력 약화’ 지방수험생 불이익 크다니

2012학년도 대학수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행된 6월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되면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이 서울로 논술과외에 나설 가능성이 커 사교육비 가중 등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된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치른 모의평가에서 언어·수리·외국어 등 영역별 만점자가 1~4% 수준으로, 을 수험생 70여명을 기준으로 할 때 7000여 명을 유지할 것이라 분석이다.

이처럼 ‘불수능’이 점쳐지면서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식이 확산되자 수험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최소 수강료가 100만 원을 웃도는 수도권 논술학원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이 지역에 논술 전문학원은 물론 공교육 기관이 없어 여름방학을 이용해 원정 논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쉬운 수능’으로 학업량과 사교육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당초 구상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수능과 논술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훨 지경이다.

현 정부가 입시사정관제 등 대학입시 제도 개선,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등 ‘사교육 개혁’을 내세웠지만 지방엔 아직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변별력 약화에 따른 지방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어야 한다. 대학들도 수능의 본래 취지에 맞게 논술이 당락을 결정하는 우를 벗어나는 안 될 것이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도 논술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끌어 안을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는 게 중요하다. 수험생 역시 ‘반짝 논술’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신문의 사설을 읽고 배껴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無等鼓

“사람들은 관습이라면 어떤 잔악한 행위도 기꺼이 저지른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베드쇼(George Bernard Shaw)의 말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식인(食人)행위가 일정한 의식과 종교적 규칙, 관습에 따라 행해져 왔다. 대부분의 종교가 시작되었을 때 산 제물을 바치는 것은 신(神)에게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계약이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신의 복수를 피하고, 건강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식인행위가 이뤄졌다. 죽은 자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순장(殉葬)도 고대에는 식인의식과 함께 치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함께 묻는 ‘순장’의 경우 인도에서는 지난 1829년에야 법으로 금지됐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유구하다. 인도의 순장풍습인 ‘시티’의 경우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강제로 끌어내어 배위 죽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에도 순장, 인신공양, 식인 제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피땀 흘려 일하고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치열한 경쟁에 밀려 밟아 사라져가는 지친 군상들이 바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현대판 순장·식인제도의 희생자 아니겠는가.

/홍행기 정경부 차장 redplane@

인신공양



를 구성,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문화를 재생하고자 하는 통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대표자협의회를 꾸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구도심 7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어르신, 아파트입주자회, 지역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표자협의회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담아 새로운 푸른길문화를 만들고 스스로 실천해 갈 것이다.

푸른길 주변의 구도심마을들은 이렇게 하니의 문화공동체를 이루어 광주문화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도시균형발전과 문화 중심도시 아시아문화전당이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광주 문화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무등산권 문화의 발굴과 무등산농악, 구도심의 마을굿문 허리아트 그리고 푸른길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공동체, 소통하고 하나님되는 날 통통데이 이러한 희망 기워드가 하루빨리 꽂끼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문화예술연구원>

빛고을 구도심이 다시 반짝입니다

기고



김태훈

빛이 사그라져 가던 빛고을 광주의 구도심 주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통통 뛰는 아이디어와 뚝직한 의미가 끈기와 정성으로 주민들을 이어가고 있다.

6년 전 무등산농악을 이어받은 무진농악 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십수 년째 발굴중인 무등산농악이 지역주민 생활 속에서 다시 꽃피기를 기대하며 (사)우리문화예술원은 무진농악단을 기우고 있다. 아둡고 조용하던 구도심에 환한 미소들이 퍼지고 꾸준한 민속행사와 문화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옆 구도심에 살아있는 생활문화콘텐츠 지구를 형성하고자 지역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마을굿을 복원하고 푸른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행동들을 진행 중이다.

(사)우리문화예술원은 올해도 ‘푸른길 창의학교’라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진, 영상, 그림, 동화책, 음악, 국악, 극 등 여러장르들의 교육을 주민대상 통합 프로그램들로 진행하고 있다.

푸른길 창의학교는 ‘창의적 소통’이라는 표어를 걸고 푸른길을 문화예술루트화 하자는 목표로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기획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푸른길 주변의 구도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생활문화공동체를 더럽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만 낭비하는 대학 영어강의 자제해야

광주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교가 ‘영어를 위한, 영어에 의한’ 강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영어다.

그러다 보니 학기중에도 일반 강의 자체를 아래 영어로 하는 이른바 영어강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동생의 말을 빌리자면 한심하기 짙어 없다. 영어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어를 잘한 교수도 소통능력은 한국어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 물어 겨자먹기로 영어강의를 담당한 교수와 학생들 모두 전달력과 이해도가 낮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당연히 수준 이하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질 높고

창의적인 강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우리 말로도 쉽지 않은 전공강의가 힘겨운 영어로 얼마나 되겠는가. 이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어의 중요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 취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수준 이하의 영어강의를 알아듣기 위해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정말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경쟁력의 원천은 학문의 수준이지 영어강의의 획수가 아니다. 영어능력을 키워 주려 한다면 어학강좌를 더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영어강의는 정말 필요하고, 확실히 검증되고, 받아들이기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성열봉·목포시 온문화

재래시장 살리기, 주차시설 확충·친절 손님맞이부터

이 없다. 주차하기 위해 몇 바퀴씩 빙빙 돌아야 하고, 재수 없으면 주차위반에 걸리기도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재래시장의 들쑥날쑥 하는 물건값과 상인들의 불친절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보자. 남녀 직원들이 고객을 왕처럼 떠받들어 준다. 하지만, 재래시장은 어떤가. 온갖 물건 다 꺼내놓고 설명한다. 안사면 큰일날듯한 분위기, 교환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환불도 힘들다.

재래시장 살리기는 지역 자치단체의 제도와 일반 시민들의 도움만으로는 안 된다.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면 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총 보 국 2200-541
정 경 부 2200-612	체 륙 팀 2200-697	<F A X 222-8005>	<F A X 222-0515>
내 대 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내 대 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디자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